발행인 칼럼

학생들에게 기본예절부터 가르쳐야 한다

가 금 현 발행인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발전해야 하는 것이 이 사회의 구성원인 남을 먼저 생각하는 기본적인 행동 그리고 지켜야 할 예절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경제를 비롯한 사회환경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지탱해나가야 할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로 인해 이 사회는 각박해지다 못해 삭막하게 변해 사회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는 어릴때부터 배워 익여야 할 기본예절과 기본상식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절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특히 몸에 밴 습관과 버릇은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해, 교육의 시작부터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부모와 교사를 위한 '기본생활예절교육'에서 보면 어린이가 어른으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펼치게 됨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교육의 방향을 잘못 잡아가고 있다. 가정과 학교는 물론 사회에서조차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이나 예절은 눈감아 버린 채 오직 공부 잘하는 어린이(학생)를 우선시하는 행태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부만 잘하면 잘못된 행동도 용서가 되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감싸는 학부형과 교사가 그 주범이다.

지금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서 지식과 정보화의 세계로 가고 있으나, 지나친 학식 의존과 물질문명으로 이어진 개인주의가 인간성 상실의 시대적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도 말이다. 특히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해 가정의 기능이 약화 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예의범절은 땅에 떨어졌다지만 이를 언제까지 방치 할 것인가.

현재 글로벌시대는 민족과 국가의 분명한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예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위상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 바른 예절을 배우는 것을 우리 민족, 우리나라 전통으로 여겼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에서 보듯 예절의 기초는 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우리 조상이 남겨준 예절 정신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상실되어가는 인간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며, 지적 교육 못지않게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양식이다.

하지만 현재의 예절 교육은 우리의 문화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다른 문화와 더불어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항상성(恒常性)있게 표출되어야 하며, 자연스러운 반복 훈련을 통하여 내면화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가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에서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도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예절 교육을 더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가 긍정적인 사고와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갖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 미래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탐험 정신 및 호기심을 가지고 기본예절을 갖추기 위해, 차례를 지키며 자기 주변을 청결하게 함으로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실천 가능한 예절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의 가장 기본적인 예절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뤄지는 것이 가장 옳지만, 이를 가르쳐야 할 학부모세대부터 그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보니 가정에 바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로 이제는 교육기관에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의무와 책임이 교육자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예절에 대해 후퇴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의 어린이들은 공동생활의 기본예절에 대해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만 말고, 마음으로 가르칠 것을 다짐하는 교육자가 되길 바란다.

CTN 논단

배고픔을 아시나요

가 갑 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우리의 5천년 역사는 외침과 가난의 역사였다. 950여회의 외침, 초근목피로 연명해 왔던 우리 국민이었다. 나는 광복의 해 1945년 4월에 시골 농촌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6학년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초등교시절 몇 달간씩 일제, 인공시대를 거치며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고 전쟁 중 중학교를 정전 후 고교를 거치고 대학진학 재학 중 4.19. 5.16를 맞고 졸업 후 군에 입대, 33개월복무 후 사회에 진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금도 잊지 못할 일은 배고픔이다.

점심 도시락도 어렵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직장 생활 시 1969년 수, 토 양일 분식의 날, 학교에서는 잡곡 도시락 검사, 쥐잡기운동 등 절미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농촌진흥청 허문회, 김인환 박사에게 신품종 벼 개발을 지시하여 71년 통일벼 개발이 성공한다. 기존의 쌀수확량의 2~3배를 생산하여 1974년 식량 (쌀) 자급자족에 성공한다.

이후 산업화가 성공하여 나라가 부강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된다, 1990년대 이후 통일벼 쌀은 밥맛이 없다고 밥상에서 퇴출되고 맛있는 지금의 새로운 쌀이 등장한다.

인구감소와 빵, 면류 등 대체 식단으로 쌀이 남아 돌아 농민 보호차원에서 직불금 제도가 도입되고 절대 농지 폐지도 거론된다.

보관료도 문제란다. 격세지감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작년 쌀생산량은 430만톤,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70키로그램 이하로 전체소비량은 350만톤 이하다.

남는 쌀은 80만톤 중 가공식품 소비량을 제외하고도 5~60만톤이 남아돌고 이월 재고를 감안하면 100만톤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허기진 배를 움켜지고 잘살아 보세를 외치고 토요일, 일요일, 퇴근 시간도 모르고 일했던 우직한 우리들의 세대. 독일, 중동, 월남에서 피와 눈물 그리고 땀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룩한 기적의 대한민국이다.

지금 살만하니 분열하고 갈등하고 쌈박질에 여염이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핵포기 하고 남아도는 쌀 지원 받아 배고픈 국민 먹여주고 통일 이루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배고픔은 배고팠던 사람만이 안다. 내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수십년 여정이 한국 현대사의 일부일 수 있다.

사 설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 취급한 입법 유감

국회가 지난달 8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되 '중대산업재해' 대상에는 포함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등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으로 취급해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와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는 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을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 것은 절차적으로 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이다. 교총은 이제 학교는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중대재해법에까지 안전, 보건조치 의무와 처벌 규정이 산재 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도대체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모호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법안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으로 명시하고 '등'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포함해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은 물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느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엇보다 학교가 애매한 상황에서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 불합리한 경우를 원천 차단하고,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내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지침 마련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은 안전,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학교의 조치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 지원하는 행정을 반드시 펴야 할 것이며,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교원은 교육전문가이지 공사, 시설물 등과 관련한 안전·측정·감수 영역의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 고, 차제에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보건 점검 및 조치 등의 업무는 교육청 단위에서 전문기관과 협력해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향후 시행령 제정과 지침, 매뉴얼 마련 시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한 교실' 위해 교원들 백신 우선 접종 대상 포함해야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등교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발표 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학생과 매일 접촉하는 교직원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협 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관계자들은 등교 확대와 매일 등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며 교원이 우선 접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 학력 격차 해소와 사회성 결핍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학기부터 등교가 확대되고 초등 저학년, 고3 등은 매일 등교를 하게 된다며 방역 강화를 위한 정부 조치는 종전 수준의 방역 인력 지원 외에 특단의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 속에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접종 계획을 보면 교원은 3분기, 7월 이후에나 접종 대상이다.

이에 정부가 의료진, 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대상자로 삼은 것은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하며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이며 등교 확대로 매일 수백명의 학생을 접하게 될 교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은 조 기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작년 말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 대상이 돼야 한 다고 강조했고. 교사 우선 접종은 인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 보호의 시작이라고도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우선 접종대상자에 교원을 포함시키는 한편, 1월 19일 기준 최소 17개 주에서 교사들이 백신 우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관계자들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백신 조기 확보와 함께 검정시험 등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교수·학습 등 교육 본질 충실해야

교육부가 3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 2835동을 친환경, 디지털 시설을 갖추도록 개축,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의 정서와 활동 중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친환경, 디지털 교실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매년 진행하는 노후교실 신·개축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이름만 바꿔 생색 내기 하거나, 교수·학습, 방역, 시급한 개·보수 등 필수 예산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조원 삭감되고 학교 재정도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 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철저히 검토해 학습활동 등 여타 교육 본질 예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공간 혁신과 시설 현대화는 모든 노후 학교가 추진해야 할 일이며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치적 쌓기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하드웨어적인 교실 구축만으로 스마트수업 등이 이뤄지는 게 아니며 걸맞은 교수방법, 교수자료,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그린학교, 건강한 공간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우기에 앞서 그간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며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차단을 위한 마사토 운동장 사업, 학교 공기순환장치 설치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태양광 사업은 학교가 시설 안전·관리 부담이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서는 주민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 학습환경 침해 문제와 관리·운영·책임 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학생 안전을 최 우선으로 고려하고, 학교와 교원이 관리·운영의 책 임을 지지 않도록 지자체 중심 운영체제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만물창고] 위선자 천보지이복 위불선자 천보지이화 (爲善者 天報之以福 爲不善者 天報之以禍)

신 동 호 국장
충북취재본부장

爲善者(위선자)는 天報之以福천(천 보 지 이 복) 하고 爲不善者(위불선자)는 天報之以禍(천보지이화)니다.

공자(孔子)가 말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福)으로 갚아주고, 착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災殃)으로 갚는다."

이는 명심보감(明心寶鑑) 계선편(繼善篇)에 나오는 말이다.

언뜻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상투적인 문구(文句) 같아 고리타분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글이다.

하지만 한문(漢文)은 간결하면서도 글자 하나 하나에 담긴 뜻이 심오(深奧)하다는 데 있다.

'선'(善)이란 단순히 착한 일을 뜻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인간(人間)이 태어날 때부터 천성(天性)으로 타고난 양심(良心)에 비춰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일이다. 왜 '불선'(不善) 이라고 했을까.

'악'(惡)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이 해(理解)에 쉽지 않을까?

하지만 동양(東洋)에선 선에 대해 반대되는 개념(槪念)으로 절대적인 악을 설정(設定)하지 않았다.

선악이란 성경을 위시한 서양(西洋)의 이분법적(二分法的)인 개념이지만 동양은 상대적인 개념인 '선불선'(善不善)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불선을 행하는 사람을 정죄(定罪)하고 백안시(白眼視)하는 것 이 아니라, 그가 다시 반성(反省)하 여 선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여백(餘白)을 만들어 두고 있지 아니 한가.

그리고 하늘(天)이란 단순히 절대적 존재(存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함축적(含蓄的)인 하늘의 의미(意味)가 있다.

천이란 함의엔 절대자(對者), 운명(運命), 역사(歷史), 도리(道理)의 의미가 들어있기에 하늘의 명령(命令)을 따르고 하늘의 존재를 알고 하늘의 심판(審判)을 두려워하며 하늘이 부여(附與)한 조건(條件)을 긍정적(肯定的)으로 받아들이라는 언표(言表)로 확대(擴大)된다.

각설(却說)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선한 사람은 늘 손해(損害)를 보고 사는 듯하다,

역으로 악행(惡行)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살고 늘 약삭빠르게 행동(行動)하여 이익만을 좇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또한 없다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하다 보면 스스로의 행복(幸福)도 찾을 것이며 뿌듯한 마음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 CTN http://www.ctnedu.kr
참교육을 선도해가는 CTN 교육신문
2014년 9월 1일 (주간) 등록번호 충남, 다01378
발행·편집인 가금현 / 편집국장 한성진 / 인쇄 디엠코리아(주)
뉴스제보:041-631-8114 / 광고문의:080-631-8114 / 010-4222-9009
주소 :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225 엔젤스타워2차 309호
독자서비스센터 : 041-337-1791 / 팩스 : 041-337-1790
E-mail : ctn114@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ctnews.kr
구독료 : 월 1만2000원 / 자매지 월간충탑
본지는 충청탑뉴스(제호 CTN)가 발행하며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